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5년 12월 2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성평등가족부,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 보고

성평등가족부는 12월 1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함.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분야에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함.

- 성평등가족부 업무추진방향에 맞추어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은 아래와 같음.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모두가 공감하는 거버넌스 구축

-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개편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센터 확대
-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공존공간네트워크' 운영

노동시장 성평등 제고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
- 지역핵심산업연계 직업훈련 신설(51개 과정)

모두가 안전한 사회 조성

젠더폭력으로부터 빈틈없이 보호·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가칭)' 설치 추진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76→80호)
- 폭력피해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확대(2,168→2,700건)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교육형식 다양화 등 폭력예방교육 개편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대상 확대(성매매 피해 중심→성착취물, 그루밍 피해 포함)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퇴소 지원지원수당(월 50만원) 신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흙흙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 청소년1388 온라인 상담 강화(상담원 99→115명)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지역 확대(12→14개)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성장일터' 신규 운영

청소년의 안전과 활동 보장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캠프 확대(1,020→1,350명)
- 청소년 국제교류 재개(7개국, 200여 명)
- 지역 기반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1,000개)

모든 가족의 행복한 일상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200→250% 이하)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등록제 시행(4월)
-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 확대(중위소득 63→65% 이하)

다양한 가족을 위한 포용사회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대상에 '이주배경가족'도 포함
- 취약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확대(가족센터 227→232개소)
- 가족센터 1인가구 역량강화 서비스 모델 개발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5.12.1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45ZLlc1BLbcAg4whuVH0Wzf.mogef11?mid=news405&bbtSn=710756

성평등가족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12월 22일(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제5차 기본계획(안)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모든 가족의 기본적인 삶 보장'과 '가족친화적 일터·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적 돌봄인프라 확충, △일·생활·가족의 균형 성장을 중점으로 논의함.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제5차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임.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5.12.2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oKn4rfNJYP0gdVUIhSsel0mZ.mogef21?mid=news405&bbtSn=710757

법제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는 12월 23일(화),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이번 대통령령안에는 영업허가·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음.
- 이번 개정을 통해 10개 부처 소관인 총 23개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그 결과 상시 근무 인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됨.

참고자료

• [법제처 보도자료, 2025.12.23.]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4910&tag=&pageCntBySelf=10&nPage=1&keyField=&keyWord=&cg_code=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state/mooringBillPage.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저출생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2025. 12. 15.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2025. 12. 17.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므로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2025. 12. 1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2호라목 신설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2025. 12. 18.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신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정정 또는 추후보안신고를 통해 차후 가족관계를 확정짓도록 하는 등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고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신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	2025. 12. 23.	모든 사람이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돌봄자 개인의 휴식·건강·사회보험·대체돌봄·직업활동·복귀 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돌봄휴직·돌봄휴업·돌봄급여의 보편적 보장을 구현하려는 것임.
	돌봄정책기본법안 (손솔의원 등 15인)	2025. 12. 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통합적 돌봄정책의 기본틀을 확립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체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돌봄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8인)	2025. 12. 26.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

여성고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2025. 12. 17.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및 제39조제4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2025. 12. 17.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1인)	2025. 12. 17.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2025. 12. 17.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22조).
젠더폭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2025. 12. 17.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도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주요 통계 분석 결과 공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5년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과제(연구자: 김효정 부연구위원)를 발표함.

-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실태와 변화: 2024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및 통제(5개 유형)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로, 2021년 16.1%에 비해 3.1%p 증가

참고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25.12.01.]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33523>

•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행사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이슈페이퍼 -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5.12.12.	여성신문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재판 434건 분석해보니... 도제식 구조, 위력 관계 등 특수성 외면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830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	25.12.16.	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 3천868가구에 54억5천만원 지급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5119900530?input=1195m
		한겨레	'양육비 선지급' 가구 중 여성 한부모 87.7%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4755.html
		SBS Bix	양육비 '선지급 후청구' 시행 5개월... 4천가구에 54.5억원 지급	https://biz.sbs.co.kr/article/20000278659?division=NAVER
		KBS 뉴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 3천8백여 가구에 54억여 원 지급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4278&ref=A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 수준조사」	25.12.17.	한국일보	기업 가족친화지수, 10년째 상승... 여성 근로자 많을수록 높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710130001130?did=NA
		한겨레	가족친화 기업 늘었지만... '유연근무' '가족돌봄휴직' 줄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71742001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정책 20년 포럼	25.12.18.	경북매일	경북도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정책 20년 포럼' 개최	https://www.kbmaeil.com/article/20251218500066
"인구감소, AI 시대와 여성 일자리" 정책포럼	25.12.18.	중도일보	대전충남경충 정책포럼 성료 '시시대·여성 일자리' 논의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1218010007414
성별임금고시제 법안 발의	25.12.19.	여성신문	정춘생, '성별임금고시제' 법안 발의... "고용·임금차별 해소 첫걸음"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066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	25.12.22.	뉴스시스	26~30년 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21_0003449290
		이투데이	성평등가족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https://www.etoday.co.kr/news/view/2538286
2026년 6.3 지방선거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	25.12.23.	중도일보	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비례대표의 구조적 단절과 소모성 비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1223010009060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 발표	25.12.23.	이코노뉴스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 발표... 공공 51.8점 민간 47.5점, 가족친화인증기업일수록 높아	https://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663
생애전망과 출산의향: GGS Korea 예비조사 분석	25.12.24.	오마이뉴스	"엄마까지 아프면 어떡해"...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9266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 다태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돌봄의 연속성 관점에서 한국의 다태아 정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전 단계 보다는 임신 중 및 출산 전후 단계에 집중된 사후적 정책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책 체계 전반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태아 정책은 무엇보다 임신 전 단계에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태아 임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태아 임신 이후에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 중 및 출산 전후 단계의 다태아 정책에 다태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며, 심리사회적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내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태아 출산의 특성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근거 기반 정책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5. 12.]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72673&volume=7266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제도 개선(육아정책연구소)

🔍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교사 처우 개선과 운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지정 이후 보육 프로그램 다양화, 교사 전문성 향상, 영유아 환경 개선, 부모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평균 4.8점), 97% 이상이 계속 이용 의향을 보여 제도의 신뢰성이 확인됨. 그러나 지정 및 운영기준 중 일부 항목의 중복과 불필요성이 지적되어 기준 간소화와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함.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격차를 완화하고,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25. 12.]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33&board_idx=53666&manage_idx=4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authKey=&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